

第6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의 向方

~ 정부작성지침을 중심으로본 특징과 과제 ~

李 啓 民
(韓國經濟新聞社 政經部次長)

目 次

1. 序 論
2. 對內外 여건의 전망
3. 기본목표와 중점과제
4. 總量計劃
5. 부문별 정책방향
6. 특징과 과제
7. 結 論



1. 序 論

최근의 우리경제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무척 답답한 느낌이 든다.

지지부진한 경기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심한 침체로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그 씩씩이를 보면 분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가 많아 의아스런 생각마저 든다. 이것을 先進化과정에서 나타나는 成熟經濟의 斷片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經濟活力的 老衰化로 생각된다. 지난날의 成長과정에서 우리경제가 세계적으로 과시해 왔던 開發意志가 쇠퇴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아직도 우리경제는 開發途上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축적된 富를 소모

해 가면서 福祉혜택을 나눠가질 만큼 國富가 축적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난 20여년의 開發 성과를 밑거름으로 본격적인 國富의 축적에 나서야 하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된다. 지금이야말로 經濟活力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노력보다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정부는 오는 87~9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 본격적인 계획작성에 착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초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착수한 이래 다섯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量的 확대와 質的 高도화를 기하고 국민생활의 각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高度成長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많은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문제점을 노출시켜왔다. 통화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의 가속화로 경제전반의 효율이 저하되고 70년대 후반의 중화학 공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집중으로 輕工業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불균형이 深化되었다.

지속적인 成長잠재력이 잠식되고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되었으며 인플레이와 더불어 만연된 부동산투기현상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崩潰생활자와 근로자들의 貯蓄의욕을 상실케 하는 등 부작용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이러한 高度成長에 대한 反省은 80년대에 들어 輸出둔화와 경기침체의 副作用이 속어 휘말리면서 강력하게 나타났다. 때문에 지난 82년

부터 시작된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에서는 이러한 고도성장의 폐해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중점이 두어졌었다.

成長보다는 物價安定을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民間의 自律과 競爭을 촉진하여 경제사회의 능률을 증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경제 능력의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균형 및 질적향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과감한 政策基調의 전환이 이뤄졌었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安定기반 정착과 함께 경제 각부문의 自律과 開放擴大를 통한 能率向上, 中小企業 육성, 국민편익시설의 확충 등 여러가지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었다.

지난 80 년 도매 및 소비자 물가가 각각 42.3 % 및 32.2 %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은 82 년부터 한자리 숫자로 내려와 매년 2 ~ 3 % 臺로 안정을 정착시키고 있다. 아직도 미흡하기는 하나 成長力의 회복과 함께 특히 국내저축률이 지난 80 년의 21.9 %에서 84 년에 27.4 %까지 높아졌으며 對外 開放시책의 추진으로 수입자유화율이 80 년의 68.6 %에서 85 년에 87.7 %까지 높아진 것 등은 이러한 경제능률향상의 구체적인 實證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구조적 능률향상과 국민 각계층 간의 균형된 복지향상은 앞으로 우리가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安定基調를 항구적으로 정착시켜 再燃될 소지가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不實企業의 정리, 금융산업의 발전 등 구조적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成長潛在力을 키워나가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과제에 속한다.

급속히 증대되는 국민의 경제 사회적 욕구와 갈등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사회개발수요를 확대공급하고 소득계층별 · 지역별 · 산업별 격차의 완화를 통한 衡平의 실현도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에 속한다.

현재 정부가 작성 중인 6 차 5 개년계획은 이러한 5 차계획에서의 정책기조전환과 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경제를 先進化의 成熟段階로 끌어올리는 歷史發展史의인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6 차계획의 내용은 先進社會 진입을 성

공적으로 달성키 위한 기반정비라는 차원에서도 종래의 경제개발계획과는 다른 국가발전계획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전개될 국내의 경제사회 환경을 점검해 보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6 차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對內外 여건의 전망

주요경제연구기관 등의 전망을 종합해 보면 세계경제는 과거 60 년대 및 70 년대와 같은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87 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연평균 3 %수준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開途國들은 아시아 · 太平洋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이중에서도 中共의 成長勢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89 년 이후에는 이러한 成長勢가 다소 둔화될 요인도 있다.

80 년대 후반 이후 電子, 新素材, 生命工學 등 첨단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며 특히 고도기술정보산업은 90 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主力 業種으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新興工業國의 비교우위산업분야는 機械 · 電子 등 기술 및 기능집약적인 조립가공산업과 장치산업 등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역환경은 선진국들의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保護主義 경향이 지속될 것이다. 세계 교역량은 연평균 4.5 ~ 5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세계교역의 중심이 大西洋圈에서 太平洋圈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共產國家의 對外開放政策 추주로 共產圈교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中共은 輕工業 제품분야에서의 수출을 본격화하는 반면 설비투자, 電源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기계 · 철강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국제 원자재가격은 큰 異變이 생기지 않는 한 급격한 앙등은 없을 것이나 80 년대 말에 가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경제 여건은 低成長과 保護主義의 지속으로 현재보다 큰 개선을 기대키는 어려우나 中共을 비롯한 共產圈 국가들의 對外開放 정책이 하나의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開途國들의 추격과 세계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6차계획의 추진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의 對內要因은 종래보다는 變化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발전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는 91년에 4,469만명에 이르러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현재의 1.53%에서 1.35%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는 女性の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5차계획기간 중의 年平均 26만명 증가에서 6차계획기간 중에는 37만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평균 수명은 84년의 68세에서 91년에는 70세로 연장됨에 따라 인구의 高齡化가 진전될 것이며 中高齡 노동력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餘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승용차 등 耐久消費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주택·의료·교육 등 사회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고 도로·통신 등 생활편익시설의 수준향상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地方自治의 실시로 인한 地方化 시대의 진전은 경제사회발전계획의 크나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88년의 올림픽대회는 우리나라의 國際的地位向上과 對外信認度제고는 물론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질서외식의 高揚 등으로 새로운 사회질서의 정착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6차계획기간 중의 대내외 여건은 크나큰 변수들이 많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先進化의 진입이나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 成敗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3. 기본목표와 중점과제

6차계획에서는 그동안 다져온 <安定>을 하

나의 기본전제로 하고 <能率>과 <衡平>의 提高를 기본이념으로 『自力成長 토대 위에서 福祉社會의 구현』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그동안 가장 중요시해 오던 <安定>을 항구적으로 정착된 하나의 기본전제로 삼고 계획을 작성한 것은 6차계획의 기본이념 자체가 종래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自力成長 토대 위의 福祉社會 구현」이라는 기본목표 달성을 위해 ①自律과 開放, 能率과 合理性을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의 제도발전과 기본질서의 정착」 ②지역별 특성에 알맞는 산업발전과 생활편익시설의 균형있는 확충으로 「活力있는 지역사회의 발전」 ③두터운 中産層의 형성과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으로 「사회적 衡平제고와 福祉증진」 ④산업능률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과 技術立國의 실현」 등 4가지의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경제사회의 제도발전과 기본질서의 정착은 종래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간여를 줄이고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民間의 활력을 바탕으로 成長잠재력을 自生的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노력에 相應하고 보상이 주어지도록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세워 나가야겠다는 것이다.

活力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은 그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난 大都市 집중현상을 완화하면서 이에 따른 국토이용의 비효율성 등을 제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함으로써 지방자치여건을 造成한다는 필요성이 중점과제로 제기됐다.

社會的 衡平제고와 복지증진은 그동안 누적된 分配구조의 악화와 함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회복지 측면을 확충시켜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산업구조의 개편과 技術立國의 실현은 資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좁아 對外指向的인 성장전략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최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특히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급속한 기술발전과 개방화의 진전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키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유일한 열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6차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키 위해 과제

별 정책방향과 정책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總量計劃

정부가 제시한 6차계획의 總量목표는 우선 계획기간 중 경제성장을 연평균 7% 수준으로 유지하여 목표연도인 오는 91년에 국민총생산(GNP) 규모를 1,500억달러 수준으로 높이고 1人當 GNP도 3,500달러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국내저축률이 84년의 27.4%에서 91년에는 33%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므로 국내저축만으로 투자할 경우에도 7%의 성장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아도 세계교역량의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수출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9%의 실질증가가 전망되고 소비는 5~6%, 고정투자증가율은 8%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수지면에서는 균형기조가 정착되면서 純外債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국제수지균형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되는 수출은 물량증가(실질증가)가 年9%를 유지하고 여기에 수출가격의 상승이 약 4% 수준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수출의 명목증가율은 연평균 13%를 유지, 오는 91년에 수출금액은 590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輸入은 연평균 실질증가율이 8.3%, 수입단가 상승이 3.7% 등으로 연평균 12% 증가수준을 유지 오는 91년에는 565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이에 따라 經常收支는 86년에 균형을 유지한 데 이어 87년부터는 흑자기조로 전환 오는 91년에는 약 22억달러의 黑字를 보여줄 것으로 잡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總外債는 오는 91년까지 514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外換보유나 외국에 대해서 받아야 할 금액을 합친 對外資産도 86년의 121억달러에서 91년에는 219억달러까지 늘어 이를 차감한 純外債는 86년의 345억달러를 피크로 점차 줄여들기 시작 91년에는 295억달러로 줄여들게 된다.

物價面에서 도매물가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2~3%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계획기간 중

달러貨가 약세를 보여 원자재가격은 다소 오를 전망이다. 對美 달러換率의 안정 등으로 輸入物價는 연평균 3%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국내물가요인 중 명목임금은 6%의 생산성증가를 상회하는 8~9%가 오르는 것으로 잡고 있다.

계획기간 중 인구증가율은 현재의 1.53%에서 91년까지는 1.35%로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女性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22% 정도씩 늘어날 전망이다.

취업인구는 농림·어업부문에 연평균 약 6만명(1.68%)이 줄어든 것이나 광공업 부문에서 매년 12만명(3.04%)씩 늘고 서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매년 30만명(3.49%) 정도씩 늘어 전체적으로는 매년 36만여명의 취업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失業率은 현재의 4% 수준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산업구조는 GNP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부문이 현재의 15.1%에서 91년에는 11.6%로 줄고 대신 광공업은 현재의 32.3%에서 35.6%로,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업은 11.0%에서 11.2%로 늘고 서서비스업은 현재의 41.6% 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5. 부문별 정책방향

總量計劃의 달성은 곧 경제 각 부문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정책수단 등이 얼마나 적절히 구사되고 실천에 옮겨지느냐에 달려 있다.

經濟成長展望

<表-1> (年平均, %)

	70年代平均	82~86	87~91
世 界	3.7	2.6	3.0
先 進 國	3.3	2.5	2.7
(美國)	(3.1)	(2.7)	(3.0)
(日本)	(4.9)	(4.0)	(3.9)
(유럽)	(3.3)	(1.4)	(2.4)
開 途 國	5.6	4.6	3.8
共 產 圈	5.5	3.1	3.0

資料 : WEFA, DRI 綜合

또한 총량과 부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각 부문간의 균형된 정책수단의 강구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문간의 정책방향이나 수단들이 조화를 잃게 되면 계획의 전체적인 균열이 생기고 이는 失敗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6차계획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부문별 정책 방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금융

선진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수요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고 이를 위해 租稅負擔率을 현재의 19% 수준에서 오는 91년까지 22% 수준으로 높여 나가되 정부의 가격보조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화하여 公共料金の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재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地方稅 확충 등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稅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조세구조는 金融자산소득의 종합과세를 추진하고 종합재산세제도를 발전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間接稅 중심의 稅收구조를 直接稅 중심으로 바뀌어가면서 부가가치세 특례기준의 재조정과 특별소비세 부과기준의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의 自律경영기반을 확충시키고 金利를 단계적으로 자유화시켜 나가면서 정책금융의 기능을 商業金融의 보완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축소·개편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의 大型化를 추진하고 일부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특수은행의 民營化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한다.

통화정책은 安定基調를 유지하되 경제성장·물가수준 등을 감안해서 신중적으로 운용하고 다만 住宅·서민금융 등 사회개발 수요증가에 대응한 금융기능을 확충하고 기술개발 등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체제를 수립해 나간다.

또한 地方金融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信用貸出을 확대한다.



산업기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운용체제를 정립해 나가기 위해 각종 육성법·규제법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정부투자기관의 단계적 民營化를 추진한다.

산업체질의 강화를 위해 수입자유화 시책(88년 수입자유화율 95.2%)을 꾸준히 추진하고 관세율 인하(88년 18%)를 이뤄나간다.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를 개편, 기계 및 부품공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제열화 시책 등을 발전시킨다.

農水産 구조개선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농업기계화를 확대하고 農地소유상한의 확대 등 농지제도 개선으로 企業農을 육성한다.

농업소득의 한계성을 감안 농가의 農外 소득 증대를 위해 農工地區의 확충 등을 실시하고 농촌공업 활성화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유통·정보·해운·관광 등 서서비스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제고와 획기적인 유통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한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科學技術投資를 현재 GNP의 1.25% 수준에서 오는 91년까지 2.5% 수준으로 높이고 수요측면에서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정부구매제도, 탄력관세제도, 수요자 금융 등을 활용한 우대지원시책을 펴나간다.

기술개발준비금제도 등 조세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술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기술정보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자금공급 원활화를 통해 연구개발 및 新技術企業化를 촉진시킨다.

大德연구단지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업기술고도화의 여건조성을 위한 새로운 技術都市(테크노폴리스) 건설을 추진한다.

國土 및 社會間接資本

釜山, 大邱, 大田, 光州 등 지방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産業立地는 기존공업단지를 활용하되 신규수요는 될수록 도시주변의 중소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의 균형배치를 도모한다.

통신부문에서는 우선 가입전화시설의 대량공급을 통해 87년 중 전화적체를 완전해소하고 종합정보통신망건설 기반구축과 첨단정보통신 서비스의 단계적 실용화를 추진한다.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고 전파감시 및 관리의 電算化를 이뤄나가며 우주통신 文字多重放送 등 새로운 전파기술을 개발한다.

住宅부문정책은 주택부문투자를 확대하고 주택규모의 소형화를 유도해 나간다.

주택부문투자를 현재 GNP의 5.5% 수준에서 6~6.5%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주택규모를 현행 25.7평에서 20평으로 낮춰 국민주택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20평 미만 주택에 한정시킨다. 대신 大型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제개편이나 종합재산세제 실시 등으로 重課稅한다.

오는 88년의 올림픽개최 등을 감안 6차계획에서는 환경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환경보전 투자를 늘리며 오염규제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체제를 종합적으로 수립·실시한다.

특히 환경보전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부처별 환경보전투자를 통합 실시하고 水質의 경우 水域別, 大氣의 경우 영향권 별로 淸淨지역·汚染지역·汚染尤甚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오염규제는 종래의 직접규제방식을 지양하되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 배출허용기준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화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실시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社會開發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진전에 대처할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해 大學定員을 재조정 自然系 비중을 높이는 한편 私學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금융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사회보장시책으로는 우선 國民年金制度를 오는 89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지역의료보험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매년 3백만~4백만명씩 적용대상을 늘려나가 91년까지는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停年을 연장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특히 停年 연장에 따른 기업부담가중이나 人力수급 불균형 등의 해소대책을 세운다.

근로능력이 없는 居宅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기본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公的 扶助事業을 대폭 확충해 나가되 영세민의 선정기준을 재정립한다.

영세민에 대한 公共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시켜 훈련인원의 50%까지 영세민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훈련인원을 현행 연간 4,500명 수준에서 7,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인구증가율을 현행 1.55%에서 90년대 초까지 1%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의 대도시집중완화시책을 계속 강화시킨다.

女性人力의 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한 고용관행이나 취업에 있어서의 性차별을 없애고 遊休고학력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女性自願人力뱅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6. 특징과 과제

6 차계획은 지난 62년부터 시작돼 다섯 차례에 걸쳐 시행된 5개년계획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과제들을 보완, 우리경제를 先進成熟 경제로 발전시키는 마무리 계획으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5개년계획들이 量的인 성장에 중점이 두어졌다면 6 차계획은 質的인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6 차계획의 첫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함께 外資의존이 아닌 국내저축만으로 성장을 유지해 나가는 自立經濟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고도성장과정에서 국내저축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투자재원 등 불가피하게 外資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막대한 外債의 누적을 가져와 이제는 이러한 外債누적이 오히려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外債는 440억달러에 달해 연간 外債리자지급만도 50억달러를 훨씬 넘고 있다. 이는 우리국민들이 힘들어 벌어들인 국민

소득 중 그만큼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단순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外債가 없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소득을 늘릴 수 있고 보다 부유해질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自力成長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국내저축의 획기적인 증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6 차계획에서는 현재의 저축률 27.4%를 91년에 33%까지 높이는 것으로 돼있으나 이의 달성이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이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축 중 개인저축이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그동안 우리의 고질적 병폐라고 할 수 있는 過消費의 패턴을 拂拭시키고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先決要件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저축증대를 위해 새로운 金融商品의 개발이나 특히 住宅이나 老後福祉 등의 사회정책적인 목표들과 조화시키는 장기 저축수단의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6 차계획의 두번째 특징은 成長率의 책정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목표는 7.5%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잡아 왔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매년 40만~5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3~4%의 경제성장이 필요하고 또 매년 3~4%의 노동생산성향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성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그만큼 경제규모가 커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한 3~4%의 성장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성장률은 7.5%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경제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6 차계획에서는 비록 숫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종래보다 0.5% 포인트가 낮은 7% 수준으로 다소 낮춰 잡았다는 것은 정책거조에 있어서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장률을 높여 잡을 경우 고용은 많이 늘어 나겠지만 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내저축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外債를 들어와야 하고 또 소비가 늘어나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대로 성장을 7%보다 더 낮춰 잡을 경우

適正成長率代案의 비교

<表-2> (年平均, %)

	70年代	82~86	87~91		
			I 案	II 案	III 案
GNP 成長	8.0 ¹⁾	7.3	6.5	7.0	7.5
總 投 資 率	28.6	28.9	30.5	31.1	31.6
國內貯蓄率	22.3	26.4	31.7	31.5	31.3
海外貯蓄率	6.4	2.4	-1.2	-0.4	0.3
國際收支均衡年度			1986	1986	1989
雇 傭 增 加 (就業人員, 萬名)	3.5 (40)	1.8 (26)	2.0 (32)	2.3 (36)	2.5 (39)
經濟活動人口增加 (萬 名)	3.5 (43)	1.7 (26)	2.2 (37)	2.2 (37)	2.2 (37)
失 業 率	4.1	4.1	4.2	4.0	3.8
總 消 費 (民 間)	6.8 7.0	5.3 5.6	5.0 (5.0)	5.6 (5.6)	6.2 (6.2)
固 定 投 資	12.7	10.2	7.4	8.0	8.6
商 品 輸 出	23.2	8.9	9.0	9.0	9.0
商 品 輸 入	14.2	7.9	7.8	8.3	8.8

註: 1) 80년 除外時 9.5%

外債절감이 더욱 빨라지고 국제수지 흑자가 확대되지만 성장둔화로 失業率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된다는 판단이 나와 적정 성장률을 7%로 잡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6차계획의 골격을 짜면서 成長率을 6.5%, 7%, 7.5% 등 3가지 代案을 놓고 검토한 결과 가장 적정한 성장수준이 7%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종래의 成長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自力成長의 기틀을 다지고 均衡 이념을 구현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계획기간 중의 성장수준을 外債 의존없는 自力成長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外債가 늘더라도 성장 속도를 높여 국민의 성장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의 선택에서 확장보다는 自力成長쪽을 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7%의 성장수준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의 경제규모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國力을 배양하고 國富를 늘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成長政策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다만 成長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러한 成長의 요인을 어디에서 찾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자원이 빈약하고 좁은 국내시장의 여건하에서는 對外指向的인 개발전략이 불가피한데 이는 수출증대를 통해 구현해야 할 것이다. 수출증대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만이 유일한 처방이 될 것이고 이는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모든 경제분야의 能率向上이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술개발과 경제능률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6차계획의 세번째의 특징은 地域計劃 개념의 도입이다. 과거 경제개발전략은 不均衡 成長을 주축으로 했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특정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이러한 특정분야의 발전이 여타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을 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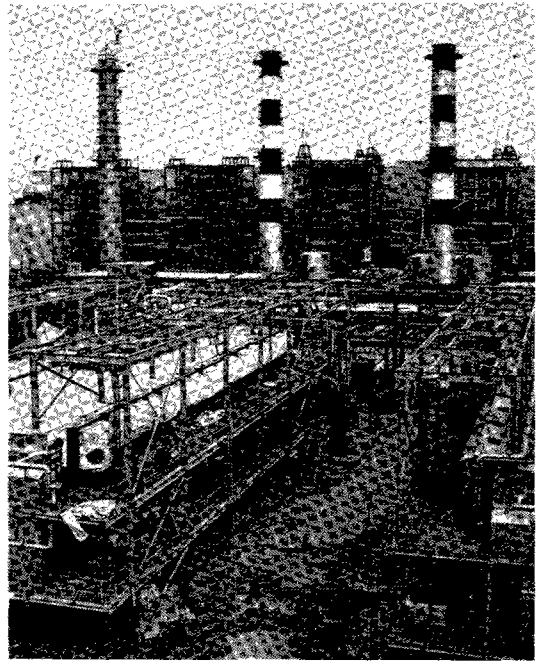
예전대 산업은 工業, 특히 重化學工業을 우선

했고 중소기업보다는 大企業을,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위주의 성장전략을 펴왔다. 그 결과 투자된 재원에 비해 그 효율이 높아 고도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성장은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더 이상 성장발전할 수 없는 제약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農業부문이 낙후됨에 따라 工產品의 소비시장이 좁아져 제조업 성장 자체를 제약하게 됐다.

중소도시의 낙후는 大都市 집중현상이 두드러져 주택, 교통, 환경오염 등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 深化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地域間 경제력 격차의 심화 등으로 지역감정의 대립현상까지 나오게 됐다. 이런 점을 해소키 위해 도입된 것이 지역계획의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기 때문에 圈域別 개발계획의 수립 등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6차계획의 지역계획은 地域間的 균형개발과 地方發展 誘因의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京釜軸 중심의 국토이용구조를 全國土로 확산하고 각 圈域別로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성격이다.

특히 이러한 地域計劃의 도입은 地方自治制의 실시라는 목표와도 연결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중앙행정기능의 지방분산과 지방의 보건·의료·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할 地域統計의 개발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지역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開發主體의 확립이 시급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지방자치제의 시행도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현재의 自治行政單位(예컨대 道단위)는 좁은 국토에 비해 너무 細分돼 있다는 느낌도 든다. 이런 면에서 행정구역이나 조직의 재조정 등도 검토해 볼직하다.

6차계획은 量的 成長보다는 質的인 發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볼 때 社會福祉 증진에 대한 중점적인 노력도 네번째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오는 89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國民福祉年金制度나 우리 실정에 맞는 最低賃金制度의 실시 그리고 전국민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의 실시 등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들이 되고 있다. 반

면 自立能力이 없는 영세민계층이나 老人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社會衡平을 높인다는 것도 이러한 사회복지 증진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책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韓國 실정에 맞는 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아직도 사람에 비유하면 青年期에 속하며 開發途上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칫 西歐式 복지정책의 추진은 무한히 뻗어나야 할 成長잠재력을沮喪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책은 成長의 活力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의 복지시책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의욕을沮喪시키거나 무위도식의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7. 結 論

資本主義 經濟에 있어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요트에 설치된 櫓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되기도 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요트는 企業活動이라는 바람에 의해 걸으로 보기에는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적절한 방향감각에 의해 櫓를 젓지 않으면 항로를 잃게 된다. 때문에 未來의

6 차계획의 주요경제지표

<表-3>

	單位	1984	85	86	87	88	89	90	91	1987~91 年平均 (%)
國民總生產(經常)	10 億 圓	65,344.9	71,680.1	78,998.7	87,650.6	97,340.9	107,800.1	119,160.1	131,717.2	10.8
國民總生產(經常)	億 弗	811	821	878	990	1,132	1,268	1,402	1,550	12.0
(成 長 率)	%	(7.6)	(6.5)	(7.0)	(7.2)	(7.3)	(7.0)	(6.8)	(6.8)	(7.0)
總 投 資 率	%	29.9	29.8	30.1	30.4	30.7	31.1	31.3	31.8	31.1
國 內 貯 蓄 率	"	27.4	28.4	29.3	30.0	30.7	31.5	32.2	33.0	31.5
海 外 貯 蓄 率	"	2.3	1.5	0.8	0.3	0.0	-0.4	-1.0	-1.1	-0.4
1人當 GNP(經常)	弗	1,998	1,994	2,101	2,337	2,634	2,913	3,178	3,467	10.5
總 人 口	千 名	40,578	41,176	41,785	42,383	42,965	43,541	44,117	44,690	1.4
GNP deflator	上昇率,%	4.0	3.0	3.0	3.5	3.5	3.5	3.5	3.5	3.5
都 賣 物 價	"	0.7	1~2	1~2	2~3	2~3	2~3	2~3	2~3	2~3
經 常 收 支	億 弗	-14	-7	0	2	5	10	18	22	
貿 易 收 支	"	-10	-3	3	5	8	13	21	25	
輸 出	"	263.4	285	319	361	411	468	528	590	13.1
輸 入	"	273.7	288	316	356	403	455	507	565	12.3



목표를 향하여 櫓의 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때 자본주의 경제는 순조롭게 운항된다는 것이다.

경제계획은 이러한 향해의 목표를 설정하는 理想인 동시에 實現가능한 現實이어야 한다. 때문에 단순한 전망보다는 바람직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理想의 실현을 위한 실천수단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代案들이어야 한다.

우리경제는 그동안 5차례에 걸친 5개년계획을 통해 크나큰 성과를 거뒀다. 하나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戰後 40년간의 日本經濟成長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의 성장 또한 국제사회에서 「漢江의 기적」으로 불릴만큼 성공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의 裏面에는 보이지 않는 不合理와 非能率이 도사리고 있고 不義와 不平等도 숨겨져 있는 게 사실이다.

힘에 겨울만큼의 外債누적, 對外依存度의 深化, 農業부문의 낙후, 비생산적인 유통 구조, 과도한 낭비풍조 등 成長의 果實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이 잉태되어 왔다.

이제 우리경제는 이러한 不合理와 非能率을 제거하면서 自力成長의 成熟된 經濟로의 도약을 이뤄 나가야 할 크나큰 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세계의 경제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기만 한다.

거칠어지는 국제경제의 격랑을 헤치면서 꾸준한 成長과 發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國民的 共感帶의 형성과 총체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내용은 하나의 작성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작성지침을 토대로 앞으로 각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31개의 부문별 경제계획위원회에서 분야별 6차계획안을 오는 10월말까지 마련하고 다시 이들 부문계획에 대해 연말까지 약 2개월 동안에 걸쳐 정책내용의 整合性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실무계획단계에서 조정된 부문계획은 86년 1~5월 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을 열어 보완하며 86년 6월까지 본계획의 작성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사회발전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公布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6차계획의 내용은 아직 정책구상단계이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조정의 과정이 남아 있다. 때문에 6차계획의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목표의 문제에 대한 논란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다만 6차계획의 성격은 과거의 5차례 계획과는 다른 의미를 지녀야 함은 명백하다.

시기적으로도 2000년대를 바라보는 전환기적 의미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발전단계에 있어서도 新興工業國으로서 先進國으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점에서 6차계획기간 중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韓國經濟의 진로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의 수단못지 않게 經濟를 이끌어가는 基本哲學을 定立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의 여건조성이 조화있게 이뤄져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계획목표의 數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經濟의 기본질서의 확립과 국민 각계각층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